

경제협력개발기구, 중간 경제전망 발표

- 2025년 9월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함. 2025년 상반기 세계 경제는 관세 인상 전 조기선적과 AI 투자 확대로 회복세를 유지하였으나, 주요국의 산업생산·소매판매·노동시장 등이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OECD는 매년 3월, 9월 세계경제+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매년 5~6월, 11~12월에는 세계경제+G20+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경제전망을 발표함.

- 미국 수입 유효관세율은 8월 말 기준 19.5%로 193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관세 인상의 전체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가·고용·소비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침.
- 특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업률 상승과 신규 고용 감소가 관찰됨(주간브리프 Vol.34).

- (물가 동향) 많은 국가에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이 멈췄으며, 식품 가격 상승 등 상품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음. 서비스 물가 또한 대체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다만, 앞으로 G20 국가 대부분에서 경제 성장과 노동 시장 둔화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G20 국가의 인플레이션은 '25년 3.4%→'26년 2.9%, 근원 인플레이션은 '25년 2.6%→'26년 2.5%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세계 GDP 성장률은 '24년 3.3%→'25년 3.2%→'26년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조기 선적 효과 소멸, 관세율 상승 효과, 정책 불확실성 고착화 등이 투자와 교역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임.

- (미국) 첨단기술 부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세 인상과 순이민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년 1.8%→'26년 1.5%로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
- (유로존) 통상 마찰과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25년 1.2%→'26년 1.0%로 완만한 둔화 예상
- (중국) 조기 선적 효과 종료, 관세 인상, 재정 지원 축소 등의 결과로 '25년 4.9%→'26년 4.4%로 둔화 전망
- (한국) 최근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25년 1.0%→'26년 2.2%로 성장률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

■ OECD 주요국 경제성장을 전망 ■

(% , %p)	'24년	'25년 전망				'26년 전망			
		3월	6월 (A)	9월 (B)	조정폭 (B-A)	3월	6월 (A)	9월 (B)	조정폭 (B-A)
전세계	3.3	3.1	2.9	3.2	0.3	3.0	2.9	2.9	0.0
G20	3.4	3.1	2.9	3.2	0.3	2.9	2.9	2.9	0.0
유로존	0.8	1.0	1.0	1.2	0.2	1.2	1.2	1.0	△0.2
일본	0.1	1.1	0.7	1.1	0.4	0.2	0.4	0.5	0.1
한국	2.0	1.5	1.0	1.0	0.0	2.2	2.2	2.2	0.0
미국	2.8	2.2	1.6	1.8	0.2	1.6	1.5	1.5	0.0
중국	5.0	4.8	4.7	4.9	0.2	4.4	4.3	4.4	0.1

*출처: OECD('25.09.23), 기획재정부('25.0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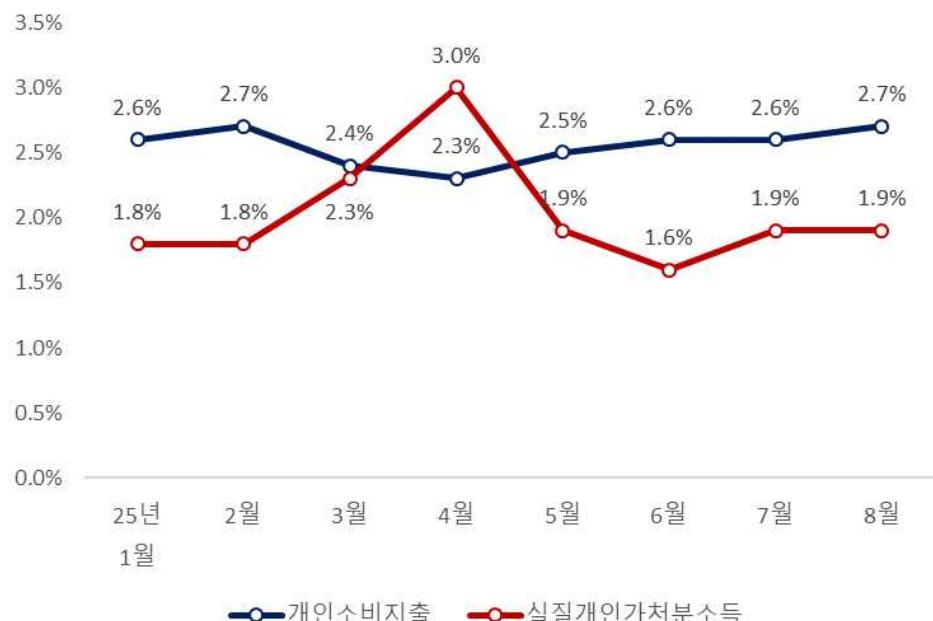


세계 경제 동향

● 미국 8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 동향 | 2025-09-26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 2025년 9월 26일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8월 개인소득 및 소비지출(Personal Income and Outlays)를 발표함.
- 8월 명목 개인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전월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실질 가처분소득은 0.1% 늘어 소득 증가세가 다소 완만하게 이어짐.
 - 가처분소득은 개인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소비나 저축을 위해 사용 가능한 소득을 의미함.
 - 소득 증가는 서비스업 중심의 임금·급여 확대 및 메디케어 등 정부 이전지출 증가가 주도
 - 미국의 8월 고용증가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제조업 및 정부 부문의 고용은 감소함.
- 개인소비지출(PCE)은 전월 대비 0.6% 증가(실질 개인소비지출은 0.4%)하였으며, 서비스(772억 달러 증가)와 재화(520억 달러 증가) 모두에서 지출 확대가 나타남.
 - 개인소비지출(PCE)은 미국 가계의 소비 규모를 보여줌.
- 개인저축률은 4.6%로 전월(4.4%)대비 상승하였으며, 총 저축액은 1조 600억 달러로 확대됨. 이는 가처분소득 증가에 힘입어 소비와 저축이 동시에 확대된 결과로 보임.
 - 개인저축률은 가처분소득 대비 개인 저축 비율
-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하였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균원 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을 나타냄.

| 2025년 미국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및 실질가처분소득 상승률 추이(전년 동월 대비) |





국내 경제 동향

● 2025년 9월 소비자·기업 심리지수 발표 | 2025-09-24, 2025-09-26 한국은행; 2025-09-24 아시아경제

- 2025년 9월 24일 한국은행은 9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0.1로 전월 대비 1.3p 하락했다고 발표하였음.
- 소비자심리지수는 6개의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종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 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지난 4~8월 동안 꾸준히 상승하였으며, 6개월 만에 소폭 하락함.
- 특히, 앞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음.
- 9월 향후경기전망 CSI는 97로 지난 6월 100을 넘어서 경기회복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을 나타냈으나, 꾸준히 소폭 하락하며 9월 100 이하로 내려감(5월 91→6월 107→7월 106→8월 100→9월 97).
- 9월 주택가격전망 CSI는 112로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 이후 7월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매월 소폭 상승하고 있음(6월 120→7월 109→8월 111→9월 112).
- 2025년 9월 26일 한국은행은 9월 기업심리지수(CBSI)가 전산업 기준 91.6으로 전월 대비 0.6p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기업심리지수는 9개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2003~ 2024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함.
- 제조업 9월 CBSI는 93.4(전월 대비 +0.1p), 비제조업 9월 CBSI는 90.5(전월 대비 +1.1p)로 모두 소폭 상승
-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동향지수를 종합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월 중 91.3으로 전월 대비 3.3p 하락함.
- ❖ 소비자심리지수는 여전히 장기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한편, 전자·영상·통신장비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규 수주 증가와 자금 사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그러나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이 향후 경기 흐름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 2024~2025년 9월 소비자·기업심리지수 추이 |





세계 농업·농정 동향

● OECD 곡물 수출제한 품목 주요 동향 | 2025-09-23 OECD

- OECD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곡물 수출제한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이번 분석은 쌀·밀·옥수수·대두 4대 곡물을 대상으로 했으며, 세계 시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국제 가격 급등이나 공급 불안 시, 수출국 정부가 국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자국민의 식량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임.
 - 전체 곡물 수출제한 조치 가운데 쌀이 4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밀 26%, 옥수수 18%, 대두 10% 순으로 나타남.
 - 정책 수단으로는 수출쿼터(물량 제한), 최저수출가격(MEP, 일정 가격 이하 수출 금지), 수출세 부과 등이 주로 활용됨.
- 곡물 수출제한 조치는 일부 주요 곡물 수출국에 집중적으로 나타남.
 - 인도·러시아·아르헨티나·우크라이나 4개국이 전체 수출 제한 조치의 85%를 차지하며, 이들 국가의 정책 변화가 세계 곡물시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인도는 그간 유지해오던 쌀 수출 금지, 쿼터, 세금, MEP 등을 대거 철회하며 제한 조치 규모가 크게 축소됨.
 - 아르헨티나는 옥수수 쿼터와 쌀 수출세를 폐지했으며, 러시아도 쌀·대두 세금과 밀 수출금지를 해제함.
 -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곡물 수출제한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국제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옴.
- 다만, 조치의 지속 기간이 여전히 길고 종료시점의 불명확성이 큼.
 - 전체 조치의 약 44%는 1년 미만 지속되었으며, 약 30%는 종료 시점이 명시되지 않음.
 - 종료 시점이 불명확하거나 장기간 유지되는 조치는 시장 참여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가격 급등 위험을 높이고, 국제 거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 이는 일부 국가의 정책 변동성이 세계 곡물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의미함.
- ❖ 이번 OECD 분석은 곡물 수출제한이 단기적으로는 자국 내 가격 안정을 도모하지만, 동시에 국제 곡물시장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 한국은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5% 미만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므로, 이러한 시장 불안정성이 국내 식량안보의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국제 공조 강화,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등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내 농업·농정 동향

●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발표 | 2025-09-22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2일 충북 영동군에서 열린 제15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하여, 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를 제안함.
- 이번 프로젝트는 농촌을 ‘일터·삶터·쉼터’로 전환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농촌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함.
- (일터 만들기)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주민주도형 햅빛소득마을 추진
 - 청년농업인재 육성 및 농업유산·경관 활용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 (삶터 가꾸기) 농촌을 주거·산업 등 기능별 공간으로 차별화 조성
 - 시·군별 공간계획 수립, 특화지구 육성, 빈집 리모델링·난개발 정비
 - 왕진버스, 이동장터 등 생활서비스 확대 및 AI 기반 교통모델 도입
- (쉼터 되기) 4도3촌 트렌드에 맞춰 관광·체류·정착이 가능한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화
 -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등 관광자원 연계
-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및 주민·생활인구 공유공간 조성(다시온(ON:溫)마을)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정책목표 및 세부과제 |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
내 삶을 바꾸는 농촌 성장 플랜**

· 정책목표 ·

균형성장을 이끄는 일터·삶터·쉼터로 농촌 대전환

▣ 농촌을 ‘농업 공간’에서 ‘산업·정주·관광 등 다기능 공간’으로 확장,
5극3특 초광역권 내 대도시·중소도시·농촌이 연계된 경제·생활권 구현

▣ 국토 89%를 차지하는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신성장동력 마련

· 세부과제 ·

전략 1 일터 만들기 ▶ 농촌형 지역순환경제 모델 및 창업 생태계 구축

▣ 농촌형 비즈니스모델
K-푸드 등 지역특화산업
햇빛연금
기본소득

▣ 지역순환경제 마중물 기본소득, 햅빛연금
▣ 청년농업인재 육성,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 지역특산물 및 K-푸드, 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 신산업

전략 2 삶터 가꾸기 ▶ 공간 정비·재생으로쾌적하고 편리한 농촌 구현

▣ 농촌공간계획
▪ 농촌공간계획
▪ 빈집정비
▪ 수도ポン업형 교통

▣ 시·군 농촌공간계획, 농촌특화지구(7종)
▣ 빈집 재생, 난개발시설 정비
▣ 찾아가는 의료·생활 서비스, 수요 응답형 교통모델

전략 3 쉼터 되기 ▶ 4도3촌 트렌드에 맞춰 열린 교류·체험의 장으로 전환

▣ 귀농귀촌 지원
▪ 생활인구 확대
▪ 농촌관광 활성화

▣ K-미식벨트, 동서트레일, 주민·업계 협업
▣ 농·산촌 체류형 쉼터, 워케이션, (가칭)다시온마을
▣ 귀농·귀촌 주거 인프라, 아이돌봄 지원

핵심수단

예산
제도

농촌협약을 활용한 범부처 통합 투자
농촌의 새로운 수요에 부응한 규제 합리화